

경기도

▶ 한·미 FTA로 경기 농축산업 年 991억 생산 감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경기도 내 농축산업 분야 생산액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991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부장은 1일 '한·미 FTA 쟁점과 경기도 피해대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피해 예상액은 돼지고기 313억원, 낙농유제품 197억원, 일반농산물 183억원, 쇠고기 167억원, 닭고기 131억원 등이다.

또 도내 의약 분야도 연평균 68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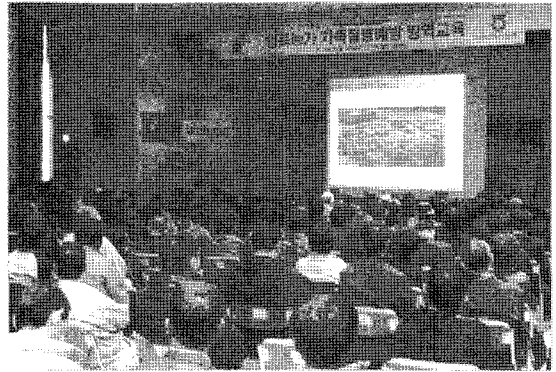
그러나 자동차 6,002억원, 전기전자 4,761억원, 화학 1,530억원, 기계 1,437억원, 섬유 809억원, 철강 578억원의 분야별 생산액이 늘어나 도내 전체 생산액은 연평균 1조6,8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군수 부장은 농축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현재 1,300억원인 경기농업발전기금 규모를 늘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선진화,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 명품한우 생산체계 구축, FTA 활용지원 축산전문기관설립, 종자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의약분야 지원을 위해 기존의 신약개발 가속화 지원프로그램 활성화와 제약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용인시, 가축질병예방 방역교육 실시

용인시는 지난 11월 14일 가축전염병예방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체류 사육농가와 닭·오리 등 기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병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질병관리과장을 강사로 초빙,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와 예방대책 추진상황, 농가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동참하고자 300여명의 축산농가가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시는 지난 1~3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시가 발생, 총 31만 두(수)의 가축을 매몰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제역 및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안성시, 축사소독 안한 농가 과태료 부과

경기 안성시가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해 축사에 소독을 하지 않거나,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6개 축산농가를 적발,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는 등 구제역 및 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를 '구제역·시 방역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11월 13일 밝혔다.

시는 특히 시가 올해 초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철새에서 고병원성 시가 집중 검출돼 확산되는 등 이전 발생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오리의 경우 전체 발생건수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등 이번 겨울에도 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시에는 150개 농가에서 579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고, 시에 취약한 오리가 65만 마리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오리 방역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시는 우제류 및 닭, 오리 2,139농가에 대해 720여 공무원을 호별 담당제로 지정해 소독, 예방접종관리 등을 중점 계도관리하고 있다.

또 구제역·시 예방 중점단속반을 시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합동으로 편성, 매월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소독의 날에 맞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소독미실시 및 소독기록부 미비치 6개 농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매주 합동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와 돼지의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는 더 한층 집중 단속해 전염병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 청원군, 2014년까지 축산분야 562억원 투입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차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청원군이 발빠르게 축산분야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나섰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쇠고기는 15년후, 돼지고기 10년후, 닭·오리 10~12년후, 젓소 10~15년 후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이다.

청원군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연차별로 축산분야에 562억원을 투입,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 선형심사, 혈통등록, 인공수정료 등 품질개량과 사료의 첨가제를 개발해 일반고기를 섭취할 때보다 혈당 및 콜레스테롤이 적어 다른 육류보다 몸에 좋은 육류개발 등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경영안정화에 134억원 지원과 이중 3천만원은 2012년 사료 첨가제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청원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능성 사료급여 등 사양관리를 통한 브랜드 육성, 돼지는 맛드린포크, 한우 청풍명월 한우, 육우 육품정 등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축산전문매장도 추가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질 좋고 싼 고기를 공급하여 일반 정육점과 음식점에서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청원군에서는 국·도비로 지원한 전문판매장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오창지역에 총사업비 10억원 중 7억원을 지원해 한우 전문판

매장을 추진중에 있다. 또 청원군 브랜드 육성과 전문판매장 건립 등에도 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농가 부담을 압박하고 있어 겨울철 유희농지에 호밀, 청보리 식재면적을 현재 350ha에서 500ha까지 늘리고, 사료작물 재배농지의 임차료도 1ha당 60만원씩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도 줄이기 위해 가축 분뇨처리 시설보강과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특히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다시 농지로 환원하는 친환경 축산농업 육성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 2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충북 친환경 농축산물 서울 급식납품 크게 늘어

충북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의 서울지역 학교 납품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11월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친환경 축산클러스터사업단이 서울지역 학교에 납품한 무항생제 한우와 육우, 돼지, 닭고기는 280톤(2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3~12월 납품량 136톤(10억3000만 원)보다 144톤(19억 원) 증가한 것. 이 사업단의 축산물을 급식에 이용하는 학교 수도 지난해 250개에서 320개로 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납품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2009년 10월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

을 맡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축산클러스터사업단은 이듬해 3월부터 서울의 각급 학교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경상남도

▶▶ 내년도 축사 지열 냉·난방시설 45억 투입

경상남도가 고유가 시대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지열을 이용한 축사 냉·난방시설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내년도 돼지·닭·오리 사육농가의 지열 이용 냉·난방시설 설치에 총 44억8천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냉난방시설은 연중 15도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땅속 150m 이내의 지열을 축사의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냉난방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및 그라우팅 공사, 열교환기 설치, 연계시설 확충, 제어장치 설치 등의 사업이 보조 80%, 자담 20%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사육규모 1000두 이상의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3만수 이상의 무창계사 ▲5,000수 이상의 무창오리사다.

▶▶ 통영, 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평가회 실시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축산 기술보급 등 문제점을 분석해 발빠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와 관계기관 등 30여 명을 초청해 '2011 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평가회'를 지난 11월 23일 통영축협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가축질병예방과 항생제 저감, 안전고품질 축산물종합생산, 한우사육시설개선, 친환경파리구제, 한우자기인공수정기술보급 등 2011년 추진사항과 성과를 설명하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2012년에는 번식우사 사양관리용 감시카메라 활용, 안전고품질축산물종합생산, 친환경축사파리구제, 축사생력화 소독, 한우일괄수태약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태정 통영축협조합장은 "한·미 FTA 체결로 축산농가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축산파동이 3~5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만을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합도 조합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산농가들에게 설명했다.

현재 통영시 축산현황은 한우 2552마리(335농가), 돼지 5981마리(6농가), 닭 4만 2572마리(253농가), 산양 2507마리(314농가) 등이다.

경상북도

▶▶▶ 가능성 축산물 사료첨가제 특허출원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양축농가들의 불만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맥섬석과 한방제재를 혼합한 새로운 가능성 사료첨가제를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이 제품은 원적외선이 많이 발생하는 소성처리 맥섬석이라는 점토광물질과 면역성 증가 및 육성률과

무게증가량이 향상되는 몇 가지의 한방소재 및 미네랄과 생균제를 함께 혼합했으며, 가축이 섭취할 수 있도록 펠릿형 또는 과립형 등의 형태로 만들어 축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가축들이 섭취가 용이하다.

새로 개발된 사료첨가제를 닭(육계, 산란계)이나 돼지(비육돈)에게 성장단계에 따라 1일 사료급여량의 0.3~0.6%까지 첨가 급여하면, 육계(닭고기), 산란계(계란) 및 비육돈(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일반 고기나 계란보다 5~10% 정도 낮고, 고기의 다즙성, 부드러움(연도), 맛과 향미는 일반 고기보다 30~35% 정도 더 좋으며,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 함량도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기나 계란 고유의 비린내 등의 잡냄새가 전혀없는 것이 특징점으로, 이는 곧 축산물 소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개발자(김병기 박사)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사료첨가제는 공동연구로 참가한 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며 "업체는 조만간 생산 설비 등을 재정비한 후 본격생산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내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 축산환경 불량한 농가 병아리 공급 제한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닭, 오리농가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불량한 농가에 대해선 병아리 공급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 전염원으로 추정되는 철새의 본격적 이동시기가 다가오는데다 지난해 A의 발생 시기와 전파양상 등을 감안할 때 올 겨울 A 재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방역추진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등 선제적 재발 방지대책 추진에 나섰다.

특히 지난 5월 수립한 '동물복지형 사육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닭, 오리농가의 사육환경 등급별 분류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306농가에 대해 농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축사시설, 사육밀도, 환기시설 등 사육환경 및 농장 소독, 사료 관리 등 차단방역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관리 농가에 대한 점검결과 사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농가 명단을 해당 시·군과 계열회사에 통보해 시설 개선 등 사육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 협조해 병아리 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농장의 일시 입식 일시 출해(올인 올아웃)를 유도해 적정 순환사육토록 하고 가축 재입식시 휴식기동안 축사를 건조시켜 소독 후 재입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군과 계열회사와 협조해 병아리 입식 계획을 상호 공유,

시군 가축 방역관이 농장의 소독 여부를 확인해 소독을 실시한 농가에 한해 병아리를 공급하는 등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A 재발 방지를 위해 농가는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긴장의 끈을 늦출 경우 도에 고병원성 A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매일 농장을 소독하고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시 신속히 신고(전화 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A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닭, 오리농가 사육환경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 방역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 시군, 계열회사 등으로 '차단방역 추진실태 점검반'을 편성해 농장 소독 실시 여부, 적정 사육밀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왔다.

▶▶ 함평,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마련

함평군은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협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지난 11월 28일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로 전남도의 농업생산 감소액이 15년간 총 1조4천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함평군은 축산분야 1천500억원, 과수분야 21억원, 채소·특작분야 313억원 등 총 1천384억 정도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오는 2014년까지 농산물유통개선, 향토산업 육성사업,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사업, 농



친환경개발사업, 농어촌의로서비스 사업 등 70개 분야를 선정해 총 4천6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군 친환경농산과 관계자는 “한·미 FTA 관련 부서별 자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중점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할 것”이라며 “특새 농업 등 농가 소득증대 사업과 2012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농업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탄소 발생을 막고 가축분뇨와 생활오수 700톤을 완전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확충해 환경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주민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금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에는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육두수 관리와 축사 신·증축 제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 김제, 용지축산밀집지 친환경사업 전개

전북 김제지역 축산밀집지역인 용지면 4개 마을에 대한 친환경사업이 펼쳐진다.

김제시는 지난 11월 14일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용지면 신암·비룡·신흥·준강마을에 총 1천311억 원(국비 727억 포함)을 들여 친환경사업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일대는 돼지 4만여 마리와 닭·오리 같은 가금류 50만 마리 등이 사육돼 하루 260여톤의 축산폐수를 배출해 악취와 수질 오염이 심하고 휴·폐업한 축사 방치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

특히 2008년 4월 전국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270개 농가의 가금류 293만여 마리가 도살처분된 아픔을 지닌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까지 휴·폐업 축사 철거, 바이오 순환림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하수처리 설치, 복지회관 건립, 소하천 자연환경복원,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해 이산

제주특별자치도

▶ 하반기 음식점 원산지 단속활동 실시

제주시는 지난 11월 23일 하반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업체는 제주시 8,120개소 음식점을 무작위 추출해 선정된 102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부서 및 읍·면·동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개품목이 해당된다.

특히 원산지 법 개정으로 2012년 4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납치(꽁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고 반찬용에 적용되던 배추김치의 경우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 적용된다.

위반 땀 위반항목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반항목별로 보면 미표시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의 경우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